

시 보

선 람	기관의 장

all ways INCHEON

제1788호

2019년 11월 19일 화요일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고 시
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367호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9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8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91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9
-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19-500호 용유배수지 건설 보상계획 공고 10

입법예고

-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-196호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4
-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-198호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

회
람

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대변인실

고 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367호

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130호, 2019. 6. 4.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9. 11. 18.

인천광역시장

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1) 산업단지 개요

가. 관리기관 :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(서구 경서동 689번지)

나. 조성목적

- 수도권내 중소기업체를 이전 집단화시켜 중소기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공업기반을 구축하고
- 관련기업의 협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효과 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며
- 친환경 업종을 집단 이전화하여 도시환경개선에도 기여토록 함

다. 추진경위

- 1990.10.14 :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(안)수립 및 동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(녹지지역→공업지역)
- 1991.07.20 :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(건설부 고시 제410호, 면적 480,000㎡)
- 1992.04.14 :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·승인 신청 (건설부)
- 1992.07.29 :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 (건설부)
- 1992.08.19 :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(인천시 고시 1992-137호)
- 1992.12.23 :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
- 1993.02.08 : 공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(시행자 - 인천주물지방공단관리공단)
- 1993.06.12 :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

- 1993.09.01 : 공업단지 조성사업 착공
- 1995.12.29 : 공단개발 사업 준공
- 1999.03.22 : 산업단지 명칭 변경(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→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)
- 1999.06.03 :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(고시 제68호)
- 2007.04.30 :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(고시 제2006-13호)
- 2009.12.07 :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(고시 제2009-370호)
- 2015.05.04 :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(고시 제2015-102호)
- 2015.06.15 :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(고시 제2015-135호)
- 2016.08.29 :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(고시 제2016-193호)
- 2019.06.04 :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(고시 제2019-130호)

라. 분양현황

(단위 : m²)

구 분	총 면 적	분 양 가 능 면 적				조성기간	조성기관
		분 양	조 성 현 황				
			조 성	미조성	소 계		
산업시설	770,222.9	761,858.6	770,222.9	-	770,222.9	'93.9.1 ~ '95.12.29	인천서부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
지원시설	21,795.3	16,048.6	21,795.3	-	21,795.3		
공공시설	117,370.3	-	117,370.3	-	117,370.3		
녹지구역	29,236.0	-	29,236.0	-	29,236.0		
계	938,624.5	777,907.2	938,624.5	-	938,624.5		

마. 입주현황

구 분	입주업체수 (개소)			면 적 (m ²)			비고
	계	제조업	기타	계	제조업	기타	
2019. 9. 현재	266	265	1	770,222.9	748,841.8	21,381.1	

바. 입지여건

- 항 만 : 인천항 이용
- 교 통 : 경인고속도로 접합 (6km, 15분)
- 용 수 : 인천광역시에서 공급 (상수도 2,500m³/일)
- 전 력 : 변전소 설치 (154,000kW/H)
- 통 신 : 한국통신공사에서 공급

2)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

가. 관리 기본 방향

- 인천 및 수도권내 이전대상 기업의 우선 입주 및 이전공장의 조기 안정지원
- 환경오염물질 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
- 관련기업의 협업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력 강화 등 기업의 집적 이익 도모

나.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

○ 입주대상 업종

-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(25)
-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(29)
- 전기장비제조업 (28)
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
-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
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(30)
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(31)
- 가구 제조업 (32)
- 기타 제품 제조업 (33)
-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업
-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업
-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태양에너지발전업
- 보관·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(52101, 52102)
- (68112) 부동산임대업(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. 단,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.)
- 연구개발업 (70)
- 상기 입주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, 물환경보전법, 악취방지법,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유발업종은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.
-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과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상기 업종 이외의 업종이라 할지라도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.
- 입주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양도·양수, 임대·차 등에 의한 신규입주자에 한한다.
-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없다.

○ 입주자격

- 산업시설구역
 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주대상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. 단,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공장(업종 및 시설)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.
 -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
 - 보관·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 -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- 지원시설구역
 -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자
- 사후관리계획
 -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을 준수 토록 관리
 -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 하였을 때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다.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

○ 용도별 구획 면적

(단위 : m²)

총 면 적	산업시설 구역	지원시설 구역	공공 시설구역	녹지구역
938,624.5	770,222.9	21,795.3	117,370.3	29,236

-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(변경)

(단위 : m²)

계	공장및물류·지식산업 시설용도	폐기물처리시설용도	비 고
770,222.9	763,952.8	6,270.1	

○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- 산업시설 구역
 - 공장 및 물류·**지식산업시설용도** :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, 보관. 창고업 및 **연구개발업**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
 - 폐기물처리시설용도 :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
 -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
- 지원시설 구역
 -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 - 건축법 시행령 별표(건축물의 용도 분류)에 의한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운수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
- 공공시설 구역 : 공공기관의 설치하는 공공시설
- 녹지구역 :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○ 용도별 구획 : 붙임 참조

라.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

(단위 : 개소, m²)

업종별	구분	2019. 9. 현재	
		업체수	면 적
계		266	770,222.9
목 재 제 지		1	350.00
석 유 화 학		3	1,590.00
전 기 전 자		11	2,309.00
비 금 속 광 물		5	14,036.00
1 차 금 속		54	202,857.00
조 립 금 속		152	338,943.20
기 계 장 비		21	11,357.00
기 타		1	500.00
비 제 조 업		6	121,558.70

○ 배치기준

- 환경적 측면 고려
- 입주수요에 따라 배치계획의 일부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.

마. 산업용지 분할

-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“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”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(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)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m² 이상으로 한다.
-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.

바. 지원시설 설치

- 폐기물처리시설, 변전소, 관리공단, 주물조합,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

사. 입주기업체 지원시설

- 폐기물처리시설 : 부지규모 11,405.3m², 처리규모 4,537m³/년
- 변전소 설치 : 부지규모 3,637m², 전압 154kV
-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: 부지규모 1,566.8m²
- 관리공단 : 부지규모 3,318.2m²
- 주물조합 : 부지규모 1,868.0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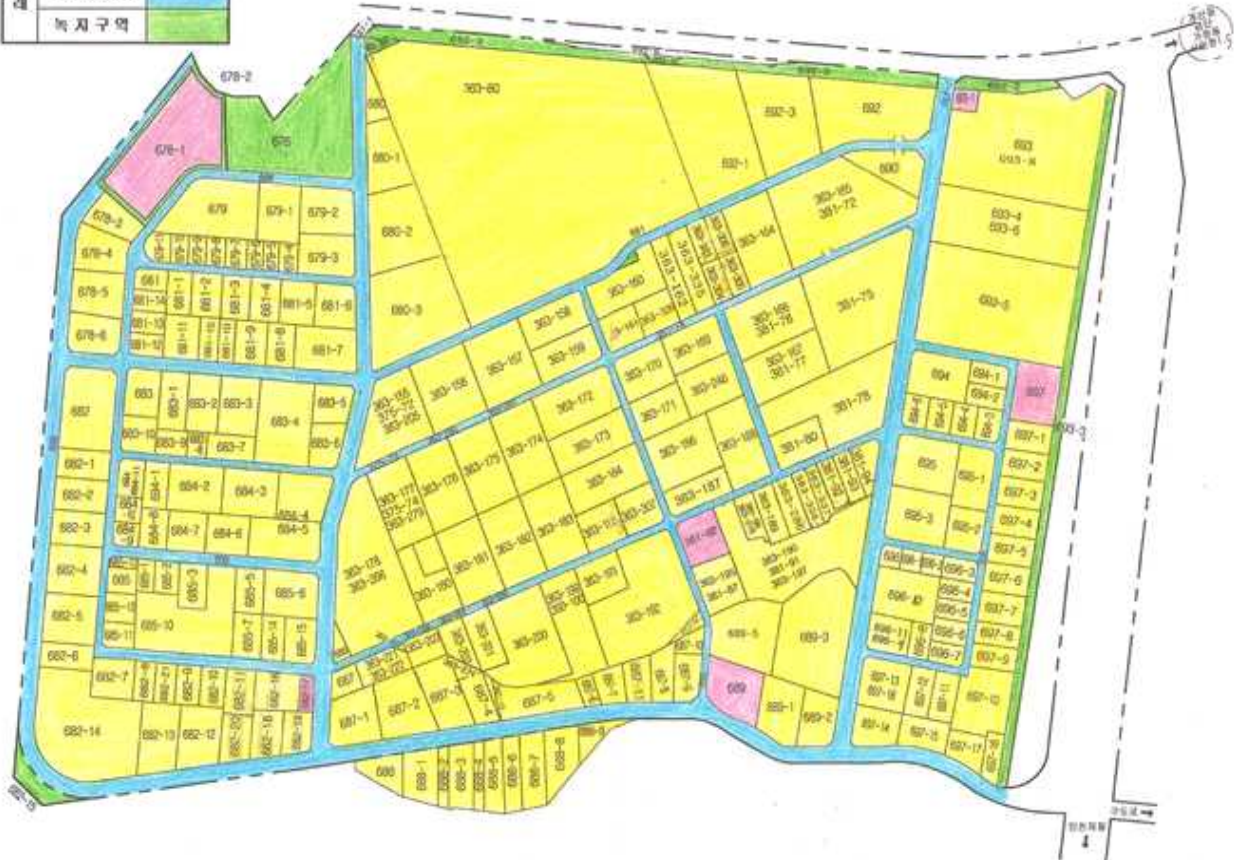
부칙 < 2019-11-18 고시 제367호 >

- ① (시 행 일)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관리기본계획 시행 전에 입주계약을 완료한 기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은 입주가능 업종으로 본다.

붙임 :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현황

범	산업시설구역	노란색
례	지원시설구역	분홍색
	공공시설구역	파란색
	녹지구역	초록색

인천서부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현황



공 고

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914호

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

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8일

인천광역시장

☐ 등록 변경 사항

등록번호	단체명	소재지	대표자	주된사업
제2009-0- 인천광역시- 19호	인천서구외국인 사회복지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88(석남동)	김 수 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교육(한국어 및 문화 기타 교육) - 다문화가정 학습교육, 직업 교육 및 상담 - 이주민 장학사업, 의사소통 및 고충상담 - 결혼이주가족 가정문제, 자녀 문제, 생활개선 - 평생교육사업 -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917호

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
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9일

인천광역시장

등록 번호	단체 명칭	대표자 성명	사무소 소재지	주된 사업	등록 년월일	등록 구분
제2019-0 -인천광역 시-25	사단법인 서도선 소리 산타령 보존회	이병기	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, 3층(가좌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도선소리산타령 및 경서도소리의 보존, 전승 및 육성 ◦ 국악예술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표 ◦ 전통예술문화(민요, 무용, 판소리, 기악, 정가 및 사물놀이)의 육성 보급 ◦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	'19.11.14	신규

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19-500호

용유배수지 건설 보상계획공고

「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294호(2019.9.30.)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「용유배수지 건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'토지보상법'이라 함)」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**이의(면적상이, 기재 오류 등)**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사업의 명칭 : 용유배수지 건설공사
- 사업시행지역 :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34-9번지 일원
-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
- 사업규모 : 도시계획시설면적 25,324㎡

2. 금회 보상 대상

구분	소재지	지 번
토지	중구 을왕동	627-37 (627-2에서분할), 627-38 (627-22에서분할), 627-39 (627-28에서 분할), 627-41 (627-30에서 분할), 산34-10 (산34-9에서 분할), 산35-41 (산35-4에서분할), 산35-42 (산35-6에서분할), 산35-43 (산35-8에서 분할), 산35-45 (산35-9에서 분할), 산35-46 (산35-18에서 분할), 산35-47 (산35-27에서 분할), 산35-48 (산35-33에서 분할), 산35-49 (산35-34에서 분할), 산35-35 , 산35-36 , 산35-50 (산35-37에서 분할), 산35-51 (산35-38에서 분할), 산35-52 (산35-39에서 분할)
필지 총계 : 18필지, 25,324㎡		
물건	해당없음	

3. 열람(이의신청)기간 및 장소

- 열람 기간 : 2019.11.19.(화) ~ 2019.12.4.(수) 【15일】
-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 -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(4층) 업무부
 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(TEL: 032-720-2052 / FAX: 032-876-8151)

4. 보상시기

-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.

• 감정평가(2020. 1월경), 협의계약(2020. 2월경)

-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○ 보상액 산정 및 통지

보상액은 「토지보상법」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(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.

○ 보상금 지급

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지급됩니다.

○ 보상절차

보상계획통지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감정평가 → 보상액 산정 → 손실보상협의

6. 감정평가업자 추천

「토지보상법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**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**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(양식-예시) ▶

토 지 소재지	지 번	편입(예정) 면적(m ²)	토지 소유자			날 인 (서명)	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전화)	감정평가 업자
			성 명	주민(법인)등록 번호 앞자리	주 소			

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**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(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)** 하여야 하고,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

7. 기타 사항

- 편입면적은 사업계획,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,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,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“홈페이지”에 접속하시면 보상계획공고 확인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(재무관리팀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19.

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

□ 토지조서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소유지분	소유자명		관계인명	권리관계
1	중구 을왕동	627-37	전	1,275	1,275	1/1	오*점	1	남*농협(석암점) :남*농협(석암점)	근저당권 지상권
2	중구 을왕동	627-38	임야	5,858	5,858	1/2	김*수	2	-	
						1/2	이*순	3		
3	중구 을왕동	627-39	도	7	7	1/1	인천광역시	4		
4	중구 을왕동	627-41	도	296	296	1/1	인천광역시	5		
5	중구 을왕동	산34-10	임야	10,453	10,453	4375/ 71528750	국방부	6		
						53657587 /71528750	인천도시공사	7		
						17866788/ 71528750	교육청	8		
6	중구 을왕동	산35-41	임야	904	904	20/22	정*무	9	중*농협	근저당권
						1/22	정*양	10	-	
						1/22	정*량	11	-	
7	중구 을왕동	산35-42	임야	1,487	1,487	1/2	김*은	12		
	중구 을왕동					1/2	김*정	13	중*농협	근저당권
8	중구 을왕동	산35-43	임야	388	388	1/1	김*수	14		
9	중구 을왕동	산35-45	임야	132	132	20/22	정*무	15	중*농협	근저당권
	중구 을왕동					1/22	정*양	16		
	중구 을왕동					1/22	정*량	17		
10	중구 을왕동	산35-46	임야	270	270	496/992	이*훈	18		
	중구 을왕동					331/992	박*섭	19		
	중구 을왕동					165/992	정*든	20		
11	중구 을왕동	산35-47	임야	12	12	1/1	(주)*광알앤디	21		

12	중구 을왕동	산35-48	임야	96	96	1/2	장*학	22	*천수협	근저당권 지상권
	중구 을왕동					1/2	김*정	23	수원세무서, 동수원세무서 경*신용보증재단	지분압류 가압류
13	중구 을왕동	산35-49	임야	137	137	1/1	정*희	24	*천수협	근저당권 지상권
14	중구 을왕동	산35-35	임야	661	661	1/1	이*숙	25		
15	중구 을왕동	산35-36	임야	661	661	331/661	이*규	26		
	중구 을왕동					165/661	김*정	27		
	중구 을왕동					66/661	신*혁	28		
	중구 을왕동					99/661	임*임	29		
16	중구 을왕동	산35-50	임야	427	427	1/562	(주)광알앤디	30		
	중구 을왕동					231/562	염*숙	31		
	중구 을왕동					165/562	구*주	32		
	중구 을왕동					165/562	박*호	33		
17	중구 을왕동	산35-51	임야	655	655	99/760	손*숙	34		
	중구 을왕동					99/760	손*화	35		
	중구 을왕동					165/760	박*경	36		
	중구 을왕동					132/760	박*수	37		
	중구 을왕동					265/760	신*무	38		
18	중구 을왕동	산35-52	임야	1,605	1,605	1/1	임*님	39		
				25,324	25,324					

입법예고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-196호

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

『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1월 15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필수 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, 인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 건강증진 등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나. 시민건강권 보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~6조)
- 라. 시민건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~18조)
- 마. 인천광역시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9~2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e-mail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5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johyeran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			
○성 명 :			
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-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책임과 시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강”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.
2. “건강권”이란 질병예방, 치료 및 재활, 영양개선,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,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.
3. “시민건강관리”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
4. “건강증진”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.

5. “관련기관”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.

6. “건강주치의”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(이하 “건강주치의 사업”이라 한다)을 위해 각종 질병등의 검사, 예방진료, 보건교육, 상담,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④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·육성한다.

⑤ 시장은 군수·구청장(이하 “구청장등”이라 한다)와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 하고, 군·구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4조(시민의 권리 등)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.

③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2장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

제5조(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건강 관리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
2.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
3.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4. 지역별·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
5.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
6.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
7.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군·구 및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)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

제3장 시민건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제8조(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보건·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
2.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·조정에 관한 사항
3.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4.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5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시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대행한다.

1.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기능
2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.

③ 위원 중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2.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인 이상
3. 건강관련 시민단체(비영리 민간단체) 2인 이상
4. 지역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
5. 학교보건, 산업안전 보건관계자
6. 시 관할 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관계자
7. 지역 주민 대표 또는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
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안전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, 관련전문가,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5조(의견청취 및 협력)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, 공청회 개최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기관에 심의 또는 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담당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제16조(회의 공개)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

제1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건강주치의 사업

제19조(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) ① 시장은 예방중심의 지속적·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.

③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, 취약지역, 저소득계층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.

제20조(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주치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관련기관
2. 인천광역시 내 군·구 보건소
3. 제21조 제2항을 통한 건강주치의 의료기관
4. 그 밖에 시장이 건강주치의 사업 환자 등록기관으로 인정한 기관

제21조(지원) 시장은 주치의의 의료비 등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5장 의료기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등

제22조(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)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23조(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)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
2.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지원
3.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
4.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

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4조(건강통계·정보 관리) ①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·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건강증진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조(책임) ○ 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 ○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보건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○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○ 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) ○ 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 ○ 제16조(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p>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역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·연구, 정보의 수집·관리·활용·보호, 인력의 양성·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의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도의회의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에 중복·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, 수립 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·분석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·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의료취약지(이하 “의료취약지”라 한다)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
2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“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
- ⑤ 제1항에 따른 평가·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, 방법,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21조(지원) 시장은 주치의 의료비 등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보조의 범위
- 아동 치과주치의 추진 관련 사업비
 - 치과주치의 서비스 비용 지원(시50%, 군·구50%)
- 예산 소요 추정 ('20년도)

사업명	사업내용	소요예산
아동 치과주치의	- 사업대상: 관내 초등학교 5학년 ※ 연도별 목표 : ('20) 전체 초5의 50% → ('21) 전체 초5의 70% → ('22~) 전체 초5의 90% - 사업내용: 치과주치의 서비스 비용 지원 · 지원금액 : 4만원/1인 · 세부내역 : 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예방진료(불소도포, 홈메우기 등)	- '20년도 사업비 : 497백만원 (시50%, 군·구50%) - 산출내역 : 대상자 수×40천원 · 12,432명 × 40천원 = 497백만원 ※ 대상자 산출근거: 전체 5학년(강화,웅진 제외) 24,863명의 50%

나. 추계 결과

-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0년 497,260천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4,201,26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, 구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강병진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입	△△△△ △△△△	—	—	—	—	—	—
	소계	—	—	—	—	—	—
세출	아동 치과주치의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	소계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재원 조달	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	시비50% 구비50%
소 계		497,260	752,000	984,000	984,000	984,000	4,201,260
국 비		—	—	—	—	—	—
시비	소 계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	일반회계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	특별회계	—	—	—	—	—	—
	기 금	—	—	—	—	—	—
군·구비		248,630	376,000	492,000	492,000	492,000	2,100,630
민 간		—	—	—	—	—	—
기 타		—	—	—	—	—	—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-198호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『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1월 15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
(안 제3조의2~제3조의3)

나.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 (안 제8조)

다.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지원 규정 마련 (안 제9조)

라.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 신설)

마.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함.(안 제11조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e-mail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7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drama56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-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”으로, “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”를 “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4조,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”를 “에서”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차별금지)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의3(인식개선)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한부모가족”을 “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최저생계비, 소득수준”을 “소득수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

7.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

제9조제2항 중 “시장은 한부모가족의”를 “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”으로, “관련”을 “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

4.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.

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제11조(한부모가족의 날)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.
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 」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<u>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</u>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 」----- ----- <u>안정적인 가족 기능</u> <u>을 유지하고 자립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 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 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,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<u>에</u> <u>서</u> ----- -----.
<신 설>	제3조의2(차별금지)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<u>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u> ..
<신 설>	제3조의3(인식개선)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<u>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
제6조(지원대상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2. 3. (생 략)

제7조(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) ①

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생계비,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

② ③ (생 략)

제8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6. (생 략)

제9조(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· 운영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-----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) ①

소득수준 -----

-----.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원사업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

7.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

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제9조(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·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 -----
-----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-----.

③ -----
-----.

1.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

2. 3. (생 략)

<신 설>

4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 · 제11조 (생 략)

1.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제11조(한부모가족의 날)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.
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 · 제13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[붙임 1]

관계법령 발체사항

관계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지원법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4. 12., 2014. 1. 21., 2018. 1. 16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3. 22., 2016. 12. 20.>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20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1., 2016. 12. 20.>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3. 3. 22., 2014. 1. 21., 2016. 12. 20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2. 2. 1., 2014. 1. 21.>

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- 1의2. "청소년 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 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 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 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 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 6. "지원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 7. "한부모가족복지단체"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4. 1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 <신설 2011. 4. 12., 2014. 1. 21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 [제목개정 2014. 1. 21.]

제5조의2(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)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4. 1. 21., 2018. 1. 16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4. 1. 21.>

1.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
 2.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·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
 3.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 4.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
-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14. 1. 21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 [제목개정 2014. 1. 21.]

제14조(고용의 촉진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14조의2(고용지원 연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0. 9.>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0. 6. 4.> [본조신설 2007. 10. 17.]

제25조(비용의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정 인 숙